문 대통령 깊어지는 개각 고민…인선 난항

총선 출마 장관들 교체 시기
외교·안보라인 교체설까지
검증 강화에 적임자 구인난
靑관계자 "이달내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놓고 고심이 깊어가는 분위기다. 총선에 나갈 장관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데다 외교·안보라인 교체설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읽힌다. 당장,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달 안에 개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14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적당한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내 개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민심의 눈높이가 올라갔고 야권의 공세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또 지난 3·8 개각 당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는 점에서 여권의 인사 검증도 강화, 인물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회전문 인사가 아닌 탕평인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주문하자,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런데 뜻밖에도 (인사) 청문회에 임하기 싫다며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답변, 인물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안보라인 교체설이 부상하고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최근 군의 기강해이 사태가 계속되자,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키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권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엄호 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강경화 외무부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 여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정세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른 부처의 개각과 굳이 시기를 맞출 필요는 없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권 내에서 나온다.

이에 반해. 청와대는 비서진 개편 작업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참모진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내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 나가려는 참모진들의 경우,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다음 달 내에는 청와대를 떠나리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비서관 중에서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김영배 민정·김우영 자치발전·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의 성패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심할 것"이라며 "문제는 시기보다, 민심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택일
與 "천천히 결정"…장고 거듭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택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나, 박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내주'인 지난주(8~12일) 내내 민주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원내 지도부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 최종 결정이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주에도 민주당이 '택일'을 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여론이 기운 상황이다. 지난 의총에서도 여야 합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의 큰 가닥이 잡혔음에도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각종 사안을 둘러싼 한국당과의 협상 변수 때문이다. 오는 19일로 막 내리는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최종 조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향,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는 대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할 사안이 많으니 물밑 접촉을 통해 하나씩 정리해나가기 위해 원내 지도부가 전반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며 "추경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특위 위원장 선택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신임대표 등 지도부들이 14일 경기도 마석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심상정 "내년 총선 비례정당 한계 넘겠다"

2년만에 정의당 대표 당선
첫 일정 故노회찬 묘소 참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3일 당권을 거머쥐면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지난 2017년 7월 이정미 의원에게 정의당 대표직을 넘긴 이후 2년 만에 다시 당의 간판이 된 것이다. 앞서 진보신당 대표(2008~2009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2011~2012년)를 지낸 만큼 이번이 네 번째 '당 대표' 직함이기도 하다.

3선 의원인 심상정 신임 대표는 서울대 재학 시절 최초로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등 학생운동을 하다 노동운동에 투신,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심 대표는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19·20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 덕양갑에서 내리 당선돼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진보정당 소속 최초로 3선에 성공했다.

심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선출 직후 수락 연설에서 "내년 총선 승리로 당당하게 진보 집권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총선 승리로 60년 양당 기득권 정치를 종식하고 다원적 정당체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서겠다. 지역구 후보들의 출마와 당선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심 대표는 1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을 방문해 지난해 별세한 동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참배했다. 심 대표는 노 전 의원 묘소에서 "노 대표님과 함께 꾸었던 꿈, 차별 없는 세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평화당, 비대위 체제로 가나

내일 진로 결정 끝장토론…합의·갈등 확산 기로

비당권파 3지대 정계개편 모색
당권파 신중 접근 속도조절론

민주평화당이 오는 16일 끝장토론 형식의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당내 비당권파가 주도하는 이번 의총에서는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개편하느냐가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비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체제의 '자강론'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비대위를 구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론 등을 주도하며 정치적 변화를 선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평화당 내부 역학구도는 비당권파 현역 의원들이 10명 이상으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가 이날 의총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 등에 반대한다면 일단 당내 결사체 형식의 모임을 결성, 적절한 시점에서 제3지대에서의 정계개편을 위한 도모할 방침이다. 모임의 명칭은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 연대'로 알려졌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선도 탈당도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결집보다 분열이 우선되고 있다는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론을 매개로 하는 정계개편 등 적극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3지대의 정치적 실체가 구체화 되기까지는 정치적 상황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성급하게 나서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정계개편론을 둘러싸고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날 의총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 의원들이 불참한다면 당내 불통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당권파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최경환 최고위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권파-비당권파 나눌 것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날 의총에서 밤을 세더라도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한다"며 "이날 의총에서 어떠한 합의를 이루느냐가 향후 평화당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나흘 남은 6월 국회, 추경안 처리될까

의사일정 최종 합의도 못해…국방장관 해임 놓고 대치

여야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닷새 전인 14일까지도 의사일정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경제원탁토론회의 정상적인 진행도 사실상 어렵게 된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어서 이번주 초를 고비로 정국 정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식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8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이튿날 이를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는 등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뿐 아니라 북한 목선의 삼적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를 18~19일 이틀간 하기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했다며 민주당이 정 장관을 엄호하면 추경을 원활하게 통과 시켜 줄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만큼 예결위 단계에서 추경 심사와 의결에 제동을 거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바 있으며 기한 내 보고서 채택과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한편, 경제원탁토론회도 예정대로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다. 여야는 오는 15일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다른 돌발 변수들이 나오면서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